

‘15년 협력사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15. 9

수도권본부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경과

- 국무회의에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 ~ '13.7.30)
-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 법사위 전문가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II. 법률적용 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III .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2항)]

III .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 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III .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III . 부정청탁의 금지

□ 위반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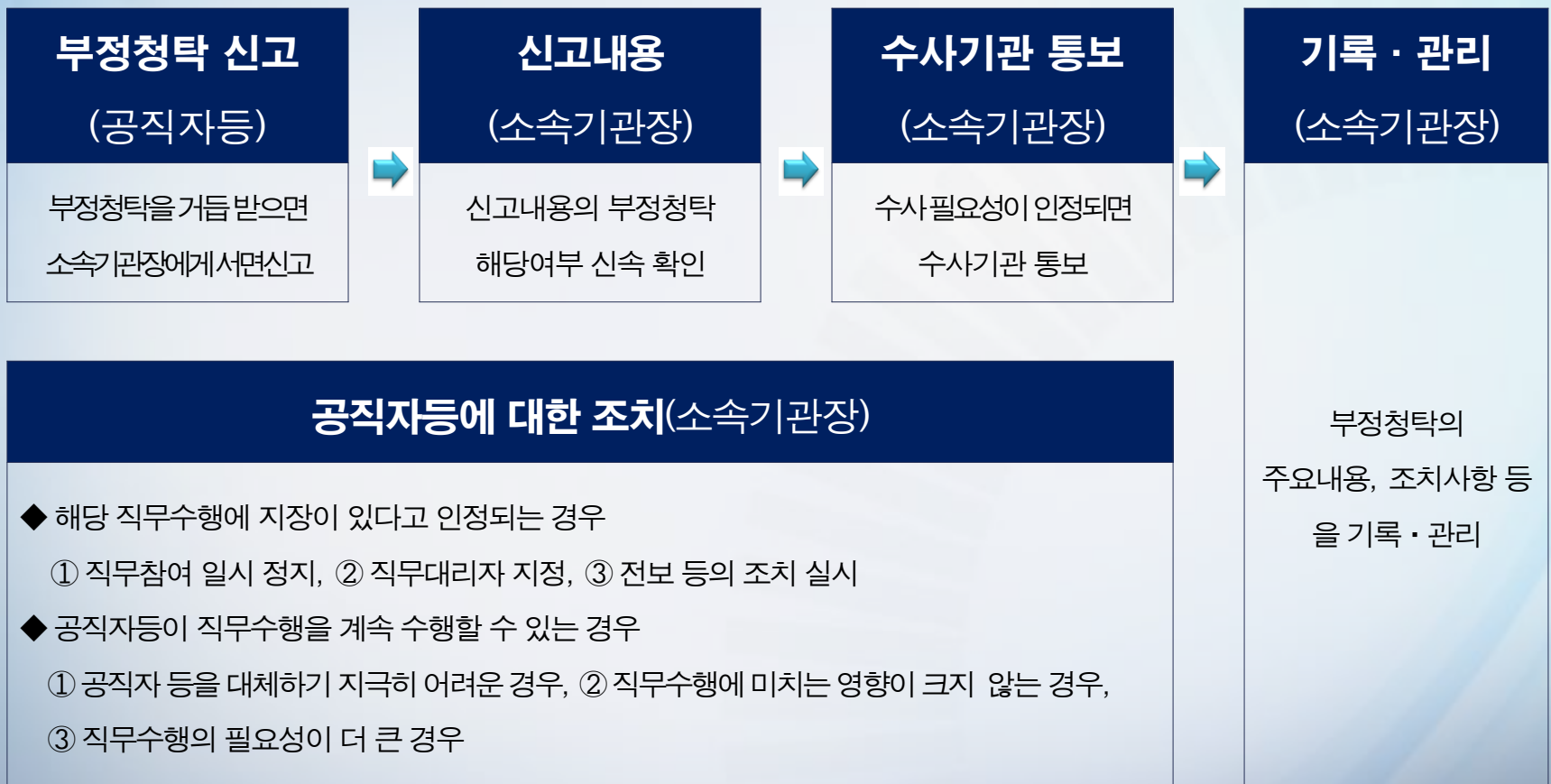
III .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III .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IV . 금품 등의 수수금지

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IV . 금품 등의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등을 제재

※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IV . 금품 등의 수수금지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V. 위반행위 신고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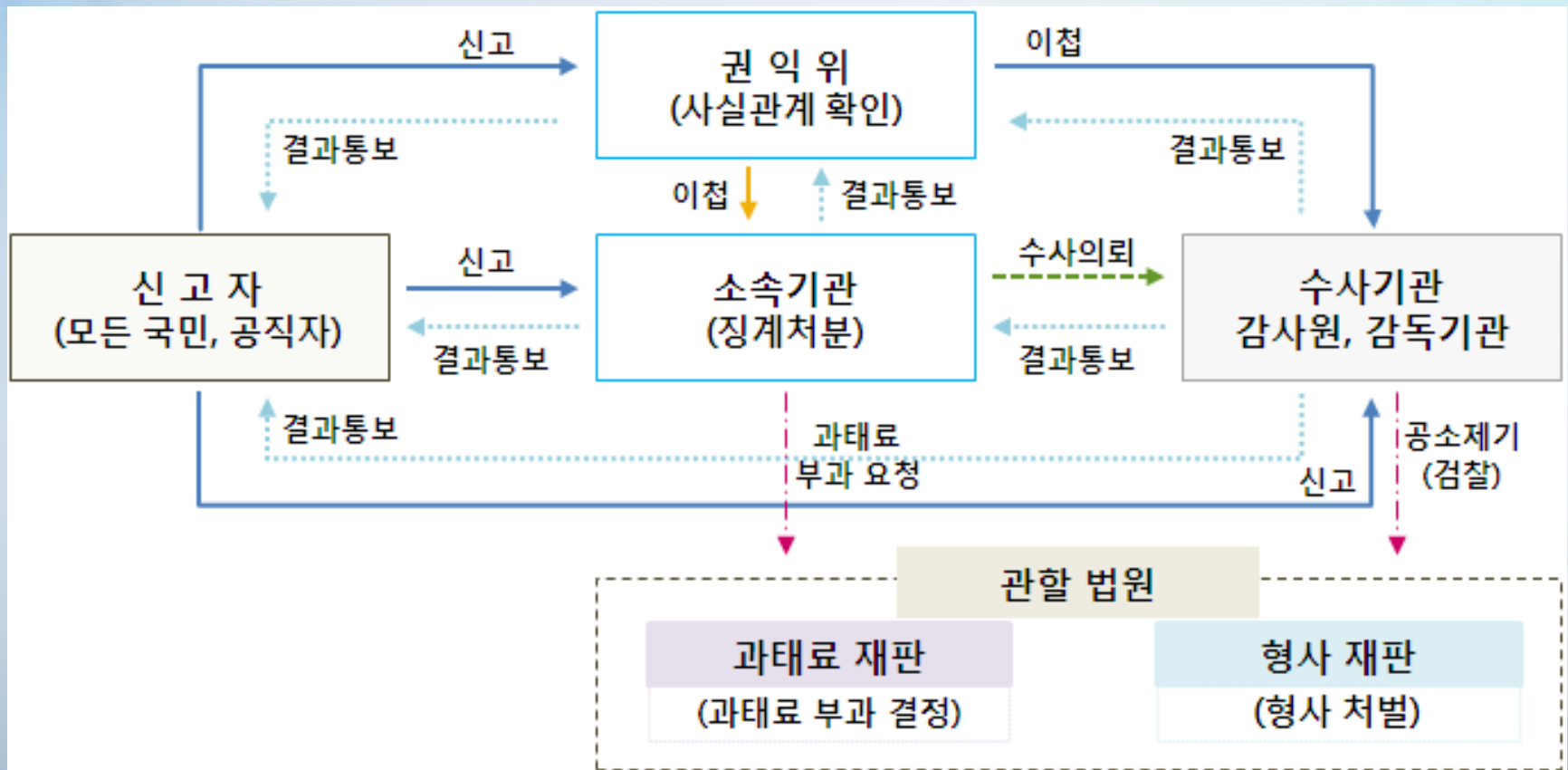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V. 위반행위 신고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 신고처리 절차 〉



VI.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 처벌 조항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 1회 1백만원 또는매 회계연도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매 회계연도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Ⅶ. 주요 질의사항

1. ‘국회의원’ 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청탁,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Ⅶ. 주요 질의사항

2.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일반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부정청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민원제기 자체가 크게 위축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여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VII. 주요 질의사항

3.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Ⅶ. 주요 질의사항

4.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까지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개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 하는 등 공개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개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징배척사업자가징명령을받은사실위반행위의내용장도가간헐적

※ 「식품위생법」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주에대한처분내용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유변에대한처분이확정된경우처분내용해당영업소와농수산물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사항

VII. 주요 질의사항

5.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Ⅶ. 주요 질의사항

6.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 상한액수를 얼마까지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Ⅶ. 주요 질의사항

7.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Ⅶ. 주요 질의사항

8. 권익위는 법률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현재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 을 구성해서 시행령 제정과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5월 중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는 등 가급적 연내에 입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 또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과는 별도로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 도모

*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0472호)이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

-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분야로 함
-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함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윤리경영' 이제는 생활입니다.